

Today's News Clip

오늘의 주요기사

2023년 9월 5일 화요일



새로운 강원



행복한 미래



함께 여는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목 차

江原日報	03면	자치도의회 임시회 돌입	1
江原日報	03면	"지방의료원 필수의료체계 재정 분담 시·군이 나서야"	1
강원도민일보	03면	"도 공공의료원 붕괴 우려... 시·군 재정분담제 도입 검토를..."	2
江原日報	03면	"하나된 자치도의회 구현 앞장"	2
江原日報	03면	최규만 도의원 "공항소음 피해 주민센터 건립"	3
세계타임즈	03면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	3
매일경제	온라인	엄기호 도의원 "강원 쌀 소비·판매 확대 지원방안 마련해야..."	4
연합뉴스		엄기호 도의원 "강원 쌀 소비·판매 확대 지원방안 마련해야"	5
KBS 강릉	온라인	20분 만에 품질된 천 원의 아침밥... 강원도도 지원하나?	6
KBS 춘천	온라인	산림엑스포 D-18일...사후활용 방안은 '아직'	7
강원도민일보	14면	강원감자조합공동법인서 유상범 의원 초청 농정간담회	8
江原日報	01면	'강원-제주-세종-전북 특별자치시도協' 연내 출범	8
강원도민일보	06면	동해항 컨테이너선 국제항로 18일 취항 전망	8
江原日報	01면	플라이강원 20억 부당 지원 의혹 경찰, 김진하 양양군수 수...	9
강원도민일보	02면	춘천 캠페인 2조원 투입 '문화-첨단산업 중심지' 조성	10
강원도민일보	09면	춘천 역세권 개발 본격화 '춘천형 판교' 탄력	10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기업 관련 민원 주민 고통 줄여야	11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원전 해제지 관광타운 의미 있다	12
江原日報	19면	[사설] 교사들 집단행동, 공감대 있는 대책부터 마련을	13
江原日報	19면	[사설] 제2경춘국도 사업, 부족한 내년 예산 꼭 반영돼야	14

2023 09 05 ()

03

江原日報



자치도의회 임시회 돌입 강원특별자치도의의회 제3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4일 본회의장에서 권혁열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신세희기자 and8729@kwnews.co.kr

2023 09 05 ()

03

江原日報

“지방의료원 필수의료체계 재정 분담 시·군이 나서야”

자치도의회 5분 자유발언서 정재웅 의원 “도 재원 한계” 강조
염기호 “강원쌀 홍보비 증액” 심영근 “청소년 진로체험 지원”

지방의료원 필수의료체계 유지를 위해서는 시·군이 재정을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원특별자치도의의회가 4일 개최한 제3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정재웅(더민주·춘천) 사회문화위원장은 “도에서 투입하는 재원에 한계가 있기에서 시·군에서 각 의료원 필수의료유지를 위한 재정을 도와 분담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원 쌀 판매 전략’을 주제로 발언한 염기호(국힘·철원) 도의원은 김진태 지사를 향해 “매년 적자를 보는 강원 쌀 판매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강원 쌀 홍보비를 더욱 증액시키고 농업진흥지구 해제 시 쌀 재배 면적 등을 고려해 달라”고 제안했다.

심영근(국힘·삼척) 운영위원장은 효율적 의정활동을 위해 두꺼운 예산서와 사업설명서를 펼쳐가며 분석하는 것보다 예산·결산 의정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발언했다. 심 위원장은 “도가 건전한 재정상태를 유지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소년 진로체험 활성화 지원’에 대한 제안도 나왔다. 박윤미(더민

주·원주) 도의원은 “도 조례 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 청소년들이 진로를 스스로 개척하고 자기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진로 체험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도보건환경연구원 원주 지원 설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한 하석균(국힘·원주) 도의원은 “세계적인 신종감염병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기후 변화 대응과 환경 관련 시민 관심도 상승으로 보건환경연구원 관련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길수(국힘·영월) 기획행정위원장은 윤탄고도1330 발전방향에 대해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폐광지역 4개 시·군이 직접 구간별 걷는 길을 조성해 자율적으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운영상황을 정례적으로 점검하는 등 활성화 방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는 15일까지 이어진다. 권혁열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은 이날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은 도민 생활과 밀접한 부분을 중심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담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며 “도의회에서 도민생 안정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으는 데 주저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현정기자 together@kwnews.co.kr

2023 09 05 ()
03

강원도민일보

“도 공공의료원 붕괴 우려… 시·군 재정분담제 도입 검토를”

도의회 임시회 개최 1차 본회의
부위원장 한창수·기획행정위원장 김길수
의정지원 시스템 필요성 주장 제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에 한창수(사진) 도의원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에 김길수 도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4일 열린 도의회 제3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부의장·기획행정위원장 선거가 진행됐다. 한창수 의원은 찬성 33표(무효 및 기권 14표)를, 김길수 의원은 찬성 28표(무효 및 기권 18표)를 받아 각각 부의장·기획행정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각 선거는 단순 후보로 진행됐다.

이날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는 도내 공공의료원 붕괴를 막기 위한 시·군 재정분담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재웅(춘천) 의원은 “강원도가 도내 5개 지방의료원에 지원하고 있는 예산은 2017년 65억원에서 2022년 360억원으로 5배 이상 증가했지만 의료진 급여인상, 코로나 19의 여파로 필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권혁열) 제3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4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개최, 12일간 열린다.



정재웅 의원 김길수 의원 하석균 의원



박윤미 의원 엄기호 의원 심영근 의원

수의료체계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공의료원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수혜자 부담원칙을 적용, 필수 의료과목 운영에 대한 시·군 재정분담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김길수(영월) 의원은 “운탄고도 1330은 전국의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지만 식수대와 휴식공간 등 필수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시군이 특성을 살린 자율적인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도 차원에서 지원방안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하석균(원주) 의원은 “원주시의 보건위생 수요는 감염병 검사 의료

2074건, 출장 횟수 285건 등 도내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이지만 관내 검사기관이 없다”며 “도 보건환경연구원 원주지원 설치가 시급하다”고 했다.

박윤미(원주) 의원은 “디지털 전환, 인구구조변화 등 직업세계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진로교육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지역특화 진로체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체계적 지원 방안을 담은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엄기호(철원) 의원은 “철원의 4개 농협이 쌀수매로 인해 매년 200여억원

의 적자를 보고 있는 실정”이라며 “강원도 쌀 홍보 강화와 쌀 가공식품 활용, 농업진흥지구 해제를 통한 대체작물 경작 촉진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심영근(삼척) 의원은 “예산의 효

율적 분석을 위한 의정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불필요한 자료 요구와 물리적 인 시간을 줄일 수 있다”며 해당 시스템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덕형

2023 09 05 ()
03

江原日報

“하나된 자치도의회 구현 앞장”

한창수 부의장·김길수 기획행정위원장 선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에 한창수(국힘·황성) 도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에 김길수(국힘·영월) 도의원이 당선됐다. 도의회가 4일

본회의장에서 제3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부의장과 기획행정위원장 선거를 각각 진행한 결과 단독 후보 등록한 한창수 도의원, 김길수 도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한창수 부의장은 “의원 한 분 한 분, 특히 초선 의원들의 의견이 의회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하나된 강원자치도의회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길수 기획행정



한창수 부의장



김길수 기획위원장

위원장은 “큰 걱정과 책임감, 고민이 앞서지만 도민들의 기대를 생각하며 위원회를 운영하겠다”며 “의원들의 고견을 경청하며 도의회 위상

과 자긍심을 잊지 않겠다”고 했다.

한창수 부의장은 황성초, 상지대를 졸업하고 황성군의회장,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김길수 기획행정위원장은 화천부군수, 도 재난안전실장, 총무행정관, 도개발공사 사장 등을 지냈다. 이날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김길수 기획행정위원장 대신 하석균(국힘·원주) 도의원이 임명됐다. 이현정기자

2023 09 05 ()

03

江原日報

최규만 도의원 “공항소음 피해 주민센터 건립”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최규만(국힘·횡성)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센터 건립 필요성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최근 제주도 일원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회장협의회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이하 대책위) 제2차 회의에 참석해 관련 내용을 주장했다.

대책위는 공항소음 문제 공동 대응과 적극적 대책 모색을 위해 지난 5월 설치됐다. 전국 시·도의회에서 추천한 13명의 의원으로 구성, 활동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주공항소음 민원센터 운영현황을 살피고 공항소음과 관련한 위원들의 논의가 진행됐다. 최규만 도의원은 “공항소음 피해보상주체에 따른 지원 격차 해소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센터 건립에 각 시·도가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황국(제주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 대책위원장은 이날 최 의원을 비롯한 위원들의 요청에 대해 시·도의회 의견을 수렴 후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할 방침이다. 이현정기자

2023 09 05 ()

/ 03

세계타임즈

대한민국 시도의회회장협의회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개최

대한민국 시도의회회장협의회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가 9월 1일 제주공항소음센터 및 제주도 일원에서 개최되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최규만(횡성) 의원이 참석하였다.

본 위원회는 공항소음 문제 공동 대응과 적극적 대책 모색을 위하여 지난 5월 대한민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설치되었다. 전국 시·도의회에서 추천한 13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7월 위원 위촉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이번 2차회의에서는 제주 공항소음



민원센터 운영현황을 확인하고 공항소음과 관련한 전문가의 강연을 청취하였다.

최규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은 공항소음 피해보상주체(국토교통부, 국방부)에 따른 지원 격차 해소와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센터」 건립에 공동으로 대응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김황국 위원장(제주특별자치시의회)은 위원들이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시도의회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 대응 자료를 만들어 조만간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기로 하였다.

김민석 기자

미디어이슈, 프레스뉴스 등 35개 언론사 보도

2023 09 04 ()

매일경제

엄기호 도의원 "강원 쌀 소비·판매 확대 지원 방안 마련해야"

양지웅



엄기호 강원도의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엄기호 강원도의회원이 4일 도의회에서 열린 제3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원 쌀 판매·소비 촉진을 위한 농정정책 마련을 도청에 주문했다.

엄 의원은 "지난해 철원 4개 농협에서 강원농협 전체 벼 수매량의 47%가량인 5만2천여t을 수매하고 있으나 전체적인 쌀 판매량이 감소해 해마다 200억여원의 적자가 발생한다"며 "쌀 판매 증대를 위한 홍보 강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 촉진을 위한 쌀 가공식품의 보급·판매 확대와 함께 쌀 재배 면적 축소 및 대체 작물 보급을 통한 가격 안정화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정책적 노력 마련에 강원자치도와 교육이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yangdoo@yna.co.kr(끝)

[양지웅]



2023 09 04 ()

엄기호 도의원 "강원 쌀 소비.판매 확대 지원방안 마련해야"



엄기호 강원도의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엄기호 강원도원이 4일 도의회에서 열린 제3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원 쌀 판매.소비 촉진을 위한 농정정책 마련을 도청에 주문했다.

엄 의원은 "지난해 철원 4개 농협에서 강원농협 전체 벼 수매량의 47%가량인 5만2천여t을 수매하고 있으나 전체적인 쌀 판매량이 감소해 해마다 200억여원의 적자가 발생한다"며 "쌀 판매 증대를 위한 홍보 강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 촉진을 위한 쌀 가공식품의 보급.판매 확대와 함께 쌀 재배 면적 축소 및 대체 작물 보급을 통한 가격 안정화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정책적 노력 마련에 강원 자치도와 교육이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yangdoo@yna.co.kr

누리일보, 뉴스중 등 27개 언론사 보도

2023 09 04 ()

KBS 강릉

20분 만에 품질된 천 원의 아침밥... 강원도도 지원하나?



[앵커]

요즘 대학생 사이에서 천 원만 내면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는 이른바 '천 원의 아침밥'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대학 측의 사업비 부담이 적지 않다 보니,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조례안도 발의됐습니다.

김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른 아침 강릉원주대학교 식당에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밥과 계란, 수프에 신선한 샐러드까지.

든든히 배를 채울 수 있는 아침 식사 메뉴지만, 학생들은 단돈 천 원만 내면 됩니다.

[이민서/강릉원주대 식품영양학과 1학년 : "컵라면 끓여 먹거나 못 먹고 수업을 간 적도 많았는데, 이렇게 싼 가격에 아침밥을 먹을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쌀 소비량 증대와 학생들의 건강 관리 등을 위해 정부가 추진한 공모사업 '천 원의 아침밥'입니다.

강릉원주대가 제공하는 아침 메뉴 단가는 6천 원.

농림축산식품부와 학생이 천 원씩, 나머지 4천 원은 대학 측이 부담합니다.

[정택경/강릉원주대 철학과 1학년 : "이른 시간이라서 사람이 없을 것 같았는데 사람이 많더라고요. 원래 아침을 먹고 싶었는데, 천 원이기도 하고 그런 게 좋아서 여기에 오게 됐습니다."]

강릉원주대를 포함해 천 원의 아침밥을 운영하고 있는 강원도 내 대학은 모두 7곳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넉넉하지 않은 사업비 탓에 특정 요일만 운영하거나 식사 인원을 제한하는 등 일부 한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천 원의 아침밥 사업이 지속되려면 학교 측의 재정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원도 차원에서 지역의 더 많은 대학생이 혜택을 받도록 사업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도 발의됐습니다.

[전찬성/강원도의회 의원 : "강원도 내 대학생들이 점점 줄고 있는 상황에서 타 지자체, 도에 있는 학생들이 강원도에 있는 대학을 다니기 위해서 그 여건 조성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현재 천 원의 아침밥 사업을 지원하지 않고 있는 지역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강원도를 포함해 7곳에 불과합니다.

KBS 뉴스 김보람입니다.

촬영기자:최진호

김보람

2023 09 04 ()

KBS 춘천

산림엑스포 D-18일...사후활용 방안은 '아직'



[앵커]

강원세계산림엑스포가 18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회 준비가 한창입니다.

앞으로는 대회 성공개최 뿐 아니라 행사가 끝난 뒤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지도 큰 과제인데요.

산림관광단지로 만들자는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문제는 사업성과 재원확보 방안입니다.

조휴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강원세계산림엑스포를 상징하는 솔방울 전망대입니다.

38억 원이 들었습니다.

엑스포 행사장 땅을 정리하고, 전시장, 정원 등을 설치하는 데 51억 원이 들었습니다.

엑스포를 어떻게 잘 치르느냐 뿐 아니라, 이후 어떻게 활용할지가 관심사입니다.

[엄창용/강원도 산림정책과장 :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소득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적극성 있게. 실질적인 부분이 창출될 수 있도록 진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설악산 국립공원과 연계한 산림관광단지로 만들자는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112억 원을 들여 오토캠핑장과 글램핑장을 갖추고 짙라인같은 즐길거리도 만들겠다는 겁니다.

사업성에 대한 지적이 나옵니다.

[유승각/강원연구원 혁신성장실 연구위원 : "약간 잼버리 야영장의 상설화 같아요. 이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우리의 어떤 세계산림엑스포 후에 휴양 레포츠 단지다. 체험단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까."]

운영은 누가 맡을 지, 돈은 어떻게 마련할지도 불투명합니다.

당장 내년부터 국비 등 68억 원이 필요한 걸로 나오는데 확보 방안도 뚜렷치 않습니다.

특히, 이런 사후활용 대책이 행사 시작을 코 앞에 두고서야 논의된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강정호/강원도의원 : "사후 관리 방안은 제일 먼저 우선시돼야 되는 사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용역 자체 발주도 늦었고 이제 와서 결론이 났다는 것은 순서가 좀 바뀐 게 아닌가."]

강원도는 이번 용역 결과에 대해 수정과 보완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사후 활용 대책 수립은 더 늦어질 수 밖에 없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조휴연입니다.

촬영기자:임강수

조휴연

강원도민일보

2023 09 05 ()

14

강원감자조합공동법인서 유상범 의원 초청 농정간담회

지역 농축산업·농촌 발전 협의

강원농협(본부장 김용욱)과 농협 평창군지부(지부장 최창순), 강원감자조합공동법인(대표 김정권), 강원감자조합 참여 농협장 등은 최근 평창 방림농공단지 강원감자조합공동법인에서 유상범 국회의원(국민의힘, 홍천·횡성·영월·평창군)을 초청, 농

정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지광천·최종수 강원특별자치도의원과 심현정 평창군의장, 이창열·남진삼·박춘희군의원 등이 참가, 강원감자산업과 관련한 현안 사항을 논의하고 지역 농축산업과 농촌 발전, 농가 소득증대 방안 등을 협의했다.

신현태 sht9204@kado.net

江原日報

2023 09 05 ()

01

‘강원-제주·세종·전북 특별자치시도협’ 연내 출범

내년 강원특별법 3차 개정 대비
대정부·국회 협상력 강화 나서

강원-제주-세종-전북 특별자치시도협의회가 연내 출범한다. 내년 초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법 3차 개정을 앞두고 시·도 간 연대를 통해 대정부·국회 협상력을 키운다는 전략이다.

강원, 제주, 세종, 전북은 지난달 31일 세종시청에서 특별자치시도국장급 회의를 열고 협의회 구성 및

출범, 사무국 설치, 향후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강원, 제주, 세종, 전북교육청도 지난 1일 교육 분야 특별법 대응을 위한 교육자치 실무협의회를 구성키로 하고 회의를 가졌다.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정운천(비례대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익산) 의원은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

다. 전북특별자치도의 특례 등을 담은 법률로 연내 통과를 노리고 있다.

강원자치도 역시 올 7월 특례 및 권한 확대를 위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마련에 착수했다. 오는 10월 법안을 완성해 연내 국회 발의, 내년 총선 전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강원과 전북의 현안이 맞물려 있는 만큼 특별자치시·도 간 협력이 시

너지를 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2006년 출범해 가장 오랜 역사와 경험을 갖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가 특별자치시도협의회장과 사무국 운영을 맡고 향후 지역별로 순회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한편 강원자치도는 현재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도출을 위한 막바지 작업을 벌이고 있다. 최기영기자

강원도민일보

2023 09 05 ()

06

동해항 컨테이너선 국제항로 18일 취항 전망

러시아~동해항 화물만 취급

속보=외국선박의 국내항 간 화물 운송을 금지하는 '카보타지' 룰에 발목이 잡혀 개설이 지연(본지 7월 27일, 8월 17일 지면·온라인 보도)되고 있는 강원 동해항 컨테이너선 국제정기항로가 빠르면 오는 18일 취항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4일 동해해양수산청에 따르면 동영해운은 지난 8월 말쯤 해수청을 방문해 동해항 컨테이너선 국제항로 개설을 위한 기존 항만사용·운항 계획을 수정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동

영해수청과 동해시·동영해운·기존하역사 등은 다음 주 초 해수청에서 관련 협의를 진행, 해수청의 조정절차를 통해 최종 취항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동영해운의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러시아~동해항~부산항 간 컨테이너선 국제항로에 기존 운항하기로 한 파나마선적의 8000t급 전용 컨테이너선(길이 121m)을 그대로 운항하기로 했다.

특히 운항하는 컨테이너선이 외국 국적 선박으로 카보타지 룰에 걸리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일단 러시아~동해항 간 직수출입 화물만 취급하기로 했다. 전인수

2023 09 05 ()

01

江原日報

플라이강원 20억 부당 지원 의혹
경찰, 김진하 양양군수 수사 착수

업무상 배임 혐의 적용 검토

항공사 장려금 지급 하루 만에
郡 등에 '회생 신청 계획' 통보
앞서 야당서도 공익감사 청구

속보=양양군이 플라이강원 기업 회생 신청을 눈앞에 두고 20억원을 지원, 적법성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본보 7월12일자 12면 보도) 경찰이 김진하 양양군수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김진하 군수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 고발 사건을 최근 춘천지검 속초지청으로부터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한 양양군민이 플라이강원에 예산 20억원을 부당하게 지원했다며 김진하 군수를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군수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양양군은 올 5월15일 플라이강원과 '항공사업 유지 협약서'를 체결하고 운항장려금 20억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플라이강원은 하루 뒤인 16일 강원도와 양양군에 '법원에 기업 회생(법정관리) 신청을 하겠다'는 통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플라이강원은 실제 5월23일 서울

회생법원에 매출 감소로 인한 부채 누적과 운항 중단에 따른 유동성 부족 등을 이유로 기업 회생 개시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를 놓고 지역사회 안팎에서는 양양군이 법정관리를 앞둔 플라이강원에 무리하게 20억원을 지원했다는 지적과 함께 법적 책임론이 불거졌다. 양양군의회는 올 5월23일 플라이강원 운항장려금 지급 관련 입장문을 통해 "재정지원에 대해 신중을 기하라는 의회의 입장을 무시하고 20억원의 혈세를 낭비했다"며 "법과 원칙, 절차적 적법성에 따른 지원인지, 기업의 회생 가능성이 없는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 것인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양양군자치분권정책협의회는 올 7월13일 주민 3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양양군이 플라이강원의 기업회생 신청 전에 지급한 20억원에 대한 불법성 여부와 혈세가 민간 기업에 쓰여 예산의 무분별한 낭비가 있었는지를 확인해 달라"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최승일 양양군 안전교통과장은 "플라이강원에 대한 지원은 절차에 따라 이뤄졌고 경찰에서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해 모두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명우·신하림기자

2023 09 05 ()

02

강원도민일보

춘천 캠프페이지 2조원 투입 '문화-첨단산업 중심지' 조성

도시재생혁신지구 후보지 선정
숙박·생활SOC·데이터산업 주도
문화개발·토양오염 정화 관련

2005년 미군부대 철수이후 20여년간 표류하고 있는 춘천 캠프페이지가 문화와 첨단산업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개발된다.

육동한춘천시장은 4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춘천 캠프페이지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2023 상반기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후보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도시재생 혁신 지구는 대도시·지방 거점도시에 있는 대규모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상업·산업·주거 등 도시기능을 복합적으로 도입, 지역활력을 회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국가시범지구로 지정되면 건축·도시·교통·재해 등을 통합 심의해 행정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자연녹지지역을 상업지역·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높일 수 있어 토

춘천 도시재생 혁신 국가시범지구 구상(안)

※상기 토지이용계획은 문화재 발굴 등 여건변동에 따라 변경가능



지의 부가 가치를 올릴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춘천시는 이번 후보지 선정에 계기로 캠프페이지를 문화와 첨단산업이 조화를 이루는 곳으로 만들 계획이다. 전체 사업면적은 52만㎡다. 국비가 최대 250억원 지원되는 마중물 사업을 통해 문화공원과 보행네트워크 등을 조성하고 복합용지 2곳에는 관광(숙

박)·첨단산업·생활SOC 등을 구축한다. 미세먼지를 줄이고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기후대응 도시숲의 기능은 그대로 유지한다. 이를 통해 춘천시는 데이터·바이오·의료 등 첨단산업을 주도할 공간을 확보, 2만명 이상의 고용을 예측하고 있다.

2조원으로 추산되는 사업비 조달은 공공주도 개발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춘천시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공동출자해 부동산투자회사(REITs)를 설립, 필요한 자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운용하는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총사업비의 70% 한도 안에서 출자·용자를 받을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금융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춘천시는 보고 있다.

더욱이 정부와 춘천시가 캠프페이지 개발 방향에 대해 협의,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앞으로 캠프페이지 개발 계획이 반복될 가능성은 적다는 게 춘천시 판단이다. 춘천시는 내년 상반기 도시재생 혁신지구계획을 수립, 공모를 신청하고 2026년 상반기 시행계획 인가를 받아 착공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캠프페이지의 문화개발과 토양오염 정화는 마지막 관련이다. 춘천시는 최근 캠프페이지 39만3468㎡를 대상으로 2차 오염토양반출작업에 들어갔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오염 토양 반출을 마칠겠다는 계획이지만 문화재 발굴 조사가 남아있어 2025년은 돼야 관련 절차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캠프페이지는 미래 세대를 위한 소중한 유산으로 시민공원이라는 기본 형태는 유지하되 춘천의 성장을 위한 거점으로 조성해야 한다"며 "향후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주변지역에 재투자하는 상생의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오세현 ▶관련기사 9면

강원도민일보

2023 09 05 ()

09

춘천 역세권 개발 본격화 '춘천형 판교' 탄력

캠프페이지 도시재생 혁신지구
근화동 역세권 개발 계획 연계
R&D 중심 복합문화공간 조성

캠프페이지 개발 방향이 확정되면서 민선8기 춘천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역세권 개발 계획도 주목을 받고 있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캠프페이지 부지 안에 R&D를 중심으로 한 첨단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역세권 일대를 '춘천형 판교'로 만들겠다는 민선8기의 계획에 도전력을 받을 전망이다.

4일 본지 취재 결과 춘천시는 하수처리장 이전 부지를 포함, 근화동

499-1번지 일원 약 50만4562㎡를 대상으로 역세권 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주거와 상업, 문화, 환승센터 등 복합기능을 집중 배치해 미래형 거점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사업비는 5411억원으로 추정되며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춘천시와 국가철도공단, 강원도개발공사, 춘천도시공사가 참여한다.

육동한 시장은 R&D와 미술관 등을 결합, 이 구역을 춘천형 판교로 만들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캠프페이지가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후보지로 지정되면서 역세권 개발 계획도 같이 맞물려 탄력을 받을 것으로 춘천시는 기대하고 있다.

해당 계획은 현재 기재부 예비타당성 심의를 통과하기 위해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 단계다. 춘천시 관계자는 "캠프페이지 개발 방향이 정해졌기 때문에 국가철도공단 측과 협의해 역세권 개발 계획과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시장이 바뀔 때마다 매년 개발 계획이 변경됐던 캠프페이지의 역사도 주목을 받고 있다. 1958년부터 운영된 캠프페이지는 2005년 철수할 때까지 반세기를 춘천에 주둔, 춘천의 역사와 문화,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쳤다. 춘천시는 2012년부터 1750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들여 국방부 소유였던 부지를 매입하기 시작했고

2016년 부지 매입을 완료했다.

하지만 활용계획은 매년 '원점'이었다. 민선 6기 때는 뉴욕 센트럴파크를 본 딴 시민공원으로, 민선 7기 때는 공원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문화적 요소가 결합된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 나왔다.

이번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후보지 지정의 경우 정부와 춘천시가 캠프페이지 개발 방향을 협의, 정부 재원을 받기로 했다는 점에서 더 이상의 변화는 없다는 게 춘천시 입장이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춘천의 위대한 유산인 캠프페이지가 춘천의 도약, 균형발전, 미래세대를 위한 역할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현

강원도민일보

2023 09 05 ()
/ 19

기업 관련 민원 주민 고통 줄여야

-원주 채석장 확대 및 자재 공장 신설 마찰 격심 우려

최근 원주시에서 채석장 확대가동과 건축자재 공장 신설을 둘러싸고 주민 반대여론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원주시 귀래면과 흥업면 주민들이 미세먼지, 소음, 진동 등 건강 안전 문제와 밀접한 채석장 허가면적 추가 추진 및 건축자재 공장 신설에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원주시내와 거리 곳곳에 현수막이 나붙었으며, 사법 대응에 나서는 등 주민과 기업 간 갈등과 마찰이 고조되고 있어서 완화책이 필요합니다.

원주시 귀래면에서는 축구장 면적의 약 79배에 달하는 채석장이 추가 확장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귀래리 중심으로 채석장만 5곳이 들어서 있습니다. 채석업체 듀네스는 기존 허가지 22만㎡에 11만㎡를 더 늘려 2033년까지 작업기로 하고 원주환경청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채석 기업 경기개발은 기존 허가지(23만㎡)에 무려 2배 가까운 44만㎡를 확장해 총 67만㎡의 채석단지를 추진 중입니다.

주민들은 향후 10여년 이상 채석장을 가동하려는 기업 움직임에 대해 거부감이 극심합니다. 귀래리를 중심으로 들어선 채석장만 이미 5곳으로 그동안 소음, 진동, 분진 등 생활 피해가 심각하다고 밝혔습니다. 몇 년 전부터

촉구해 온 피해 대책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오히려 면적을 더 늘리는 것은 주민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분개합니다. 주민 의견을 무시한 행정 인허가는 있을 수 없다고 항의합니다.

흥업면에서는 당초 모르타르 생산을 추진해 온 중천케미칼의 공장 신설에 반대여론이 거셉니다. 주민대책위원회에서는 원주 도심과 주요도로에 까지 반대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모르타르 생산이 어렵게 되자 부지 면적을 줄여 황토비장용 건축자재로 품목을 바꿔 신설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이 강력합니다. 기업마다 여러 사정은 있겠으나, 민원 발생으로 인해 마을 분위기가 흉흉하고 불필요한 갈등이 초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우리 지역 발전은 현지 주민이 주도한다는 인식이 이전보다 강화됐습니다. 지방자치 경험이 쌓이면서 주민 의견과 직접 참여를 통한 지역의제 결정으로 성장해 왔음은 물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이든 중앙부처 산하기관이든 공정하지 않고 합리적이지 못한 행정행위에 대한 비판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주민 고통을 가중하는 민원이 하루 빨리 해소되도록 원주시는 적극 나서야 합니다.

강원도민일보

2023 09 05 ()
/ 19

원전 해제지 관광타운 의미 있다

-삼척 핵발전소 중지부 짚고 관광지도약기대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에 따라 삼척 핵발전소 건설 우려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정부가 전력 수요 급증을 이유로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공식화하자, 삼척 원전 건설 재추진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백지화된 정책을 다시 꺼내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 지역 여론입니다. 이런 가운데 삼척시가 근덕면대진 원전 해제지역을 대상으로 대규모 관광·휴양 복합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천혜의 비경을 활용해 관광 산업을 일으킨다는 계획에 시민들의 기대가 높습니다. 더불어 삼척핵발전소 논란에 중지부를 짚을 사업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관광타운 사업은 계획 단계를 벗어나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시는 최근 추경을 통해 '삼척에너지관광 복합단지 조성 사업' 추진에 따른 일부 부지 매입비 18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시가 매입에 나서는 땅은 지난 2009년 지정됐다 사업이 중단된 소방방재 산업단지 부지 74만㎡로, 지난 6월 강원도고시를 통해 산업단지 지정이 해제됐습니다. 시는 내년 5월까지 해당 부지를 3단계로 나눠 매입할 계획이며, 전체 매입 금액은 450억원 정도입니다. 2026년까지 공공과 민간 자본을 포함

해 모두 2000억원이 직접 투자되고, 민간사업인 관광 숙박 시설까지 포함하면 5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관광타운이 조성되면 삼척은 영동 남부를 대표하는 해양 관광도시로 위상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시는 이 지역의 독특한 지형과 자연을 그대로 활용해 암석·바다·대지·숲·빛이라는 5가지 테마를 주제로 한 팜랜드와 탄소 숲, 생태정원 등 국내 최초 탄소제로 단지를 조성합니다. 포리조트와 호텔 등 대규모 민간 숙박시설 유치 위해 곧 민간사업자를 모집해 올해 중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지정·확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삼척 근덕면 일원은 1980년대부터 원전 지정과 해제가 반복되면서 개발 제한에 따른 주민 재산권 침해와 지역 통합저해 등 심각한 후유증을 앓아왔습니다. 또한 핵발전소 추진 논란으로 지역 개발에도 발목을 잡혔습니다. 대규모 관광·휴양 복합타운 조성사업은 위축된 지역 경제에 돌파구 역할을 할 것입니다.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면 원전 건설 가능성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도 핵발전소 백지화와 정에서 발생했던 반목과 갈등을 청산하고 화합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江原日報

2023 09 05 ()

/ 19

교사들 집단행동, 공감대 있는 대책부터 마련을

교단에서 안타까운 일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교사 3명이 잇따라 또 목숨을 끊었다. 교사 커뮤니티와 교원단체는 세 교사도 악성 민원과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교권 추락에 따른 교사들의 분노와 실망은 견줄 수 없는 형국이 되고 있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교사들의 7차 주말 집회에는 20만명(주최 측 추산)이 참가했다. 전국에서 버스 600대가 올라오고, 제주도 등지에서 1만5,000여명의 교사가 항공편으로 상경했다고 한다. 국회 정문에서

1km 떨어진 지하철 5호선 여의도역까지 검은 옷을 입은 교사들의 행렬이 이어졌다. 교사들은 동료의 잇단 죽음에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참담하다. 4일은 교사들이 지정한 이른바 ‘공교육 멈춤의 날’이었다. 서초구에서 숨진 교사의 49재일을 맞아 전국에서 교사들의 추모 집회가 열렸다.

교권 추락은 공교육 붕괴와 연결되는 심각한 문제다. 하지만 학생, 학부모 등과 얽혀 있는 사안이어서 그간 전면적으로 부각되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 상처는 깊어 터지고 교사를 꿈꾸던 교대 학생들의 중도 이탈도 급증하고 있다. 교육부의 ‘대학알리미’ 공시 자료에 따르면 춘천교대 중도 탈락자 수는 2022년 기준 52명을 기록, 2년 전인 2020년 25명에 비해 약 2배 늘어났다. 이는 전국 13개 초등교육양성기관 중 서울교대(83명), 경인교대(71명) 다음으로 높은 수치다. 전국적으

로는 지난해 496명이 중도 탈락, 2018년 153명보다 3배가량 증가했다. 특히 수도권과 가까운 지역에서 중도 탈락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교사들의 집단행동과 분노의 현장 목소리를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공감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대표적인 게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고소·고발 남발 대책이다. 최근 5년간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고발당한 사례가 1,200건을 넘었다. 상당수가 불기소나 사건 종결 처리됐

지만 교사의 심적 고통과 부담이 심각하다. 이에 대응하는 법안이 여야 가릴 것 없이 발의된 만큼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그리고 대책은 종합

적이고 신중해야 한다. 한 예로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그것이다. 교권을 확립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지는 몰라도 이런 방안은 자칫 소송전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치밀하게 접근해야 한다. 되레 교사들의 고통과 부담을 더 가중시킬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일선 교육 현장에선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새로운 대책이 논의되지만 달라지는 건 없다고 호소한다. 교사의 교육활동이 훼손되고 있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 원인을 어느 하나로 돌려 이를 표적 삼을 게 아니다.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데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한다.

최근 세 명의 교사 또 목숨 끊어

‘공교육 멈춤의 날’ 지정 등 분노 폭발

교권 확립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지혜 발휘를

江原日報

2023 09 05 ()

/ 19

제2경춘국도 사업, 부족한 내년 예산 꼭 반영돼야

제2경춘국도 건설공사가 사업 확정 4년8개월째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다. 사업이 지연되면서 사업비 부족 사태가 초래됐다. 제2경춘국도의 사업비는 1조2,862억원으로 책정돼 있다.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추진됐으나 사업을 맡겠다는 시공사가 없어 연쇄 유찰 사태를 겪었다. 자칫값 및 인건비 증가 등 인플레이션과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공사비에 적자 시공이 불가피하자 사업에 나서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와 강원특별자치도는 기획재정부에 제2경춘국도 건설사업 총 사업비 5,000억원의 증액과 내년도 공사비 500억원 반영을 요청하는 등 사업 정상화를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고 있어 걱정이 커지고 있다. 예정대로 준공될 수 있도록 지역의 역량을 한데 모아야 할 때다.

제2경춘국도 사업은 서울~춘천고속도로의 통행량이 크게 늘어나고 주말과 휴일 극심한 정체가 빚어지면서 필요성이 대두됐다. 서울~춘천고속도로는 당초 하루 교통량 4만5,000대로 설계됐지만 주말이면 2배가 넘는 10만대 이상의 차량이 몰리면서 거대한 주차장으로 바뀌고 있다. 이용객들이 불만을 공공연히 드러낼 정도다. 영서 북부지역은 물론 수도권을 비롯한 경기 북부

권의 통행 불편을 넘어 민생에 지장을 초래할 지경에 이르고 있다. 이에 강원권 접근성 향상과 관광수요 유발을 위해 강원도의 제안에 따라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사업이다. 수도권과 최단 거리를 유지해야 사업비도 최소화할 수 있다. 여러 지역을 경유하면 차량 흐름이 막히고 사업비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어 2029년 완공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현재 내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제2경춘국도 사업비는 20억원에 불과하다. 총 사업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정부가 내년 국비를 반영한 점을 볼 때 추진의 지만큼은 확고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국비 20억원은 4개 공구에 5억원씩 착수비로 쓰일 예정이다. 그러나 현장사무소도 제대로 열지 못할 정도로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다.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올해 안으로 설계가 모두 끝나 내년에는 실제 공사가 이뤄져야 한다. 도는 올 하반기 중 총 사업비 협의만 마무리될 경우 내년 사업비 추가 확보와 내년 하반기 극적 착공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지자체와 지역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정밀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진단, 원활한 입찰 집행과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주기를 바란다.